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목포
더불어 광장

2020. 09. 25 (제27호)

당원용

www.jnminjo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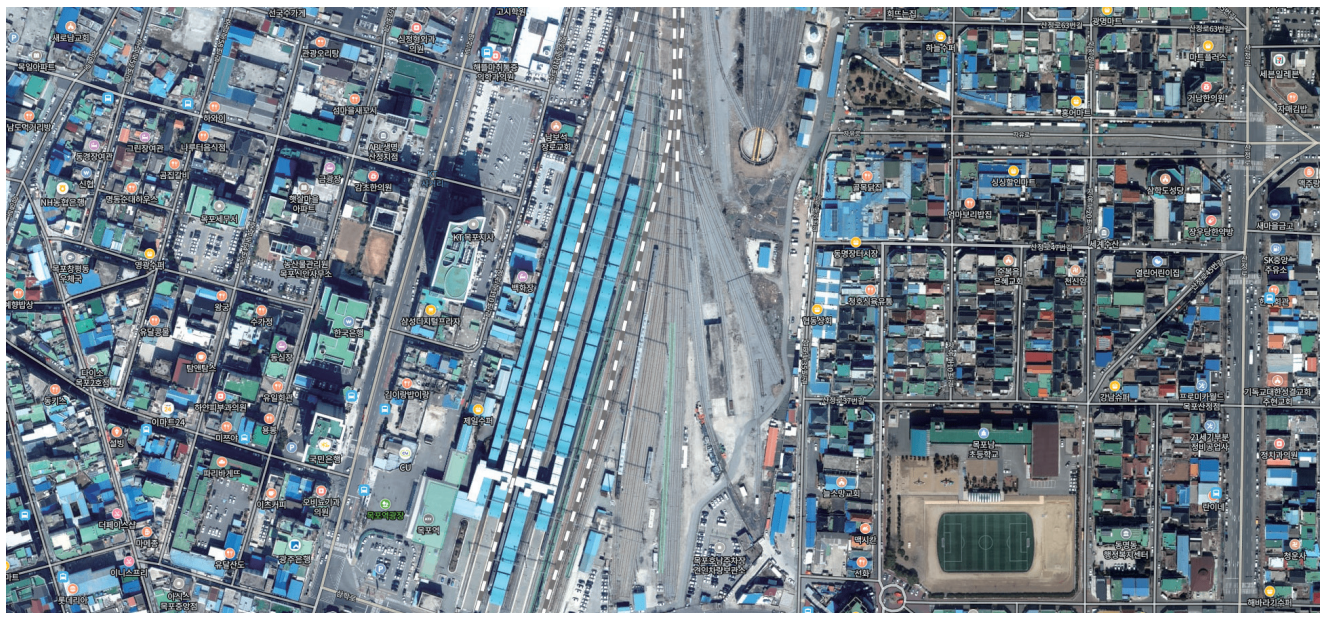
100년 이상 '낮잠' 목포역 철도유휴부지 개발 '청신호'

10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목포 중심부의 단절을 고착·심화시켜 온 5만5천여 평의 목포역 유휴부지를 제대로 활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김원이 의원은 지난 6일 철도유휴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철도유휴부지'란 철도 폐선부지와 철도부지 중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철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도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정부는 '철도유휴부지 활용지침'(국토교통부훈령)을 제정해 2015년부터 유휴부지 활용사업 공모를 추진하고 있지만 활용도는 낮은 편이다.



목포역 주변 위성사진(네이버 캡쳐)

김원이 의원 '철도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시설 사용료 감면, 부지 대부매각 수의계약 특례 가능

철도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단에 제출된 철도유휴부지 활용계획은 총 33건에 불과하며, 전국의 철도 유휴부지 2,566만㎡ 중 36%에 해당하는 920만㎡가 여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철도유휴부지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활용사업계획 수립, 국유재산 대부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가 철도유휴부지의 용도·사용 기간을 정해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고, 대부 또는 매각 공고에도 5년 이상 활용되지 못한 경우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선로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하는 시행령을 법률로 상향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철도유휴부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지자체에 사용료 감면과 부지 수의계약 대부·매각 특례조항으로 적극적인 부지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고 기대했다.

이어 "국토부, 목포시 등과 함께 오랜 세월 목포 중심부의 개발을 불가능하게 한 목포역 유휴부지 활용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목포 부주·옥암지구 고교 이전 속도있게 추진"

김원이 의원,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협의

김원이 의원은 지난 21일 장석웅 전라남도 교육감과 만나 목포 부주·옥암지구 고교 이전 문제를 협의하고 고교이전을 속도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협의에는 전경선 도의회 운영위원장, 이혁제 도의회 예산결산위원장, 박용 목포시의원 겸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등과 함께 했다.

김 의원과 장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목포시 등과 긴밀히 협력해서 이전 학교, 부지제공, 설립예산, 기존 부지 및 원도심 활성화 문제 등 현안사항을 파악하고 함께 힘을 합쳐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김 의원은 "현재 일반고 신설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기존 고교의 이전 및 재배치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일부 학교에서 이전 및 재배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더 많은 토론을 통해 상황을 정리해서 공식적으로 도교육청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교 이전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부처의 예산 지원을 받는 새로운 혁신 고등학교 모델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석웅 교육감은 "목포 원도심·신도심의 균형 있는 교육 발전,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목포시민들이 지혜를 모아주시면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민연금 보험료,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 할인 혜택 근거 마련

김원이 의원은 16일 자동이체에 따른 연금보험료 감액 대상에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포함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는 '자동 계좌이체' 외에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해졌다. 이후 신용카드 자동이체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보험료 감액을 자동 계좌이체만 한정하여 자동이체 납부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납부 방식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법 제89조 중 '자동 계좌이체'를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해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감액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용카드 자동이체 감액 혜택으로 납부자 간 형평성 해소는 물론, 납부 편의까지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계좌잔고 부족 등에 따른 연체금 발생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이, 원내부대표 임명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예산결산특별위)이 24일 당 원내부대표에 선임됐다.

김 의원은 원내부대표에 임명됨에 따라 전라남도 예산확보 및 정책현안 해결에 청신호가 열릴 전망이다.

김 의원은 "원내부대표의 중책을 맡아 앞으로 원내에서 지역 예산 및 정책현안 해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발로 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국회 예결특위 위원으로 신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섬 데이터 댐 구축' 사업에도 큰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맞춤형 4차추경 7.8조 국회 통과!
소상공인·돌봄·실직·저소득층 지원
모두 웃는 한가위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여수갑 더불어 광장

2020. 09. 25 (제27호)

당원용

www.jnminjoo.kr

주철현 의원이 여수지역 어민들과 함께 '전남·경남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 최종 공개변론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해상경계 현행 사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계속되는 해상경계 분쟁 해결 해결 나선다

주철현 의원(여수갑)이 자치단체 간 끊이지 않는 해상경계 분쟁 해결을 위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해상경계를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제4조 제3항을 신설하는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공유수면이 속하게 될 자치단체 해상경계는 지방자치법 제4조1항(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을 준용하고, 공유수면 경계 설정에 관하여 준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습에 따른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부 수립 이후 법령으로 공유수면에 대한 자치단체의 구역을 확정한 적이 없고, 자치단체의 공유수면 관리구역을 정하는 명문의 법률 규정도 없어 공유수면 관리구역을 둘러싼 분쟁은 계속되어 왔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2011년 '1948년 8월 15일 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의 경계가 자치단체 간 원천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주철현 의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법' 개정안 발의 …해상경계, 종전 또는 관습 따르도록 판례 명문화 "시급"

대법원은 지난 2015년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은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를 결정함에 있어서 '종전'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그 '종전'이라는 기준은 최초로 제정된 법률조항까지 순차 거슬러 올라가게 되므로, 1948년 8월 15일 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의 경계가 원천적인 기준이 된다'며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 중 1948년 8월 15일에 가장 근접한 1973년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이 현재 해상경계선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헌재에 2015년부터 2020년(8월 말 기준)까지 접수된 해상경계 권한쟁의 사건은 2015년 3건, 2016년 4건, 2018년 1건 등 총 8건으로 파악됐다.

대법원과 헌재의 판결에도 해상경계와 관련된 분쟁은 끊이질 않고 있다.

주 의원은 "대법원 판례 이후에도 자치단체 간 해상경계 분쟁은 지속되고 있다"며 "판례의 명문화를 통해 해상경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철현 의원,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법률안' 발의

주철현 의원은 최근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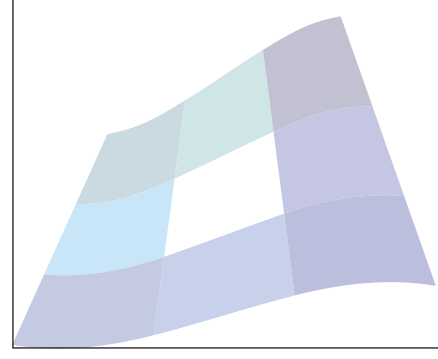
이 법안은 수산물의 어획·채취·양식·가공·판매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하기 위한 규정과 절차를 담았다.

수산 부산물 재활용 절차 규정을 마련하고 5년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해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해 수산부산물 재활용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굴 껍데기 등 부산물은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돼 직접 처리해야 했던 어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주 의원은 "수산 부산물은 그동안 처리 비용 때문에 바다에 버려지거나 비위생적으로 처리돼 악취와 오·폐수가 발생했다"며 "법률안 제정으로 1t당 25만원에 달하는 폐기물처리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고 밝혔다.



주철현 의원, "여수해만, 한국 해운물류 중심으로"

해수부 · 항만공사 "여수·광양항 발전 정책 · 재정지원 확대"

여수항도선사회 초청간담회

주철현 의원이 '여수항도선사회 초청간담회'에서 천혜의 조건을 갖춘 여수해만을 한국 해운물류 중심으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번 초청간담회는 지난 4일 도선사회 회의실에서 김영운 도선사회장과 임원,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여수광양항만공사 물류전략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여수항도선사회는 간담회에서 여수·광양항의 ▲선박 대형화에 따른 항로 확장 및 준설 ▲항 외 정박지 확대 ▲부두 접안능력 확대 및 업그레이드 등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

주 의원은 "선박 대형화에 따른 주요 항만의 선박 유치 경쟁 과 선박 안전기준 강화 등으로 여건이 변화하고 있어 국내 최적의 해상 환적지 여수해만의 해상환적 확대가 필요하다" 며 "천혜의 조건을 갖춘 여수해만과 여수항·광양항을 국내 해운물류의 중심 항만으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여수·광양항을 미래형 스마트 항만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해운 항만정책과 재정지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맞춤형 4차추경 7.8조 국회 통과!

소상공인·돌봄·실직·저소득층 지원

모두 웃는 한가위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여수을 더불어 광장

2020. 09. 25 (제27호)

당원용

www.jnminjoo.kr

김회재 의원, 전라선고속철 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촉구

“전국 2시간 대 생활권 완성…수서발 전라선 운행도 시급”
노영민 실장 “적극적으로 관련 기관에 전달하겠다” 답변

김회재 의원(여수을)은 지난 2일 국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정부 국정과제인 국토 균형발전과 전국 2시간대 생활권 완성을 위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에 전라선 고속철 사업이 반드시 반영돼야 하며, 수서발 전라선 운행도 조속히 이뤄지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노영민 실장은 “적극적으로 관련 기관에 전달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김 의원은 “지금 전국이 고속철도로 서울에서 2시간이면 도달 할 수 있는데, 유일하게 전라선만 3시간대로 남아있다”며, “익산~여수 구간은 고속철도가 아닌 평균 시속 120km로 달리는 새마을호 수준의 ‘20세기 철도’로 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라선 이용객이 2012년 176만 명에서 2019년 697만 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에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을 반영해달라는 요구가 크다”며, “김천~거제 남부 내륙철도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진행 중이고 다른 철도들도 공사 중인 만큼, 남아 있는 전라선도 하루빨리 고속철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서발 전라선 운행 관련해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평창올림픽 후 남는 열차를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행되고 못한 실정”이라며 조속한 수서발 전라선 운행을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오전에도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을 만나, 전라선고속철 4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에 반영 문제를 협의했으며, 국토교통위 활동, 원내회의 모두발언, 호남권 광역시도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전라선 직선 고속철도와 수서발 전라선 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여순사건 유가족 한 분 한 분의 눈물 모두 닦아 드릴 것”

김회재 의원, ‘여순사건 여수유족회’ 간담회
…‘여순사건특별법’ 발의 과정 설명하고 “반드시 제정” 다짐

김회재 의원은 지난달 14일 여수시청에서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와 간담회를 갖고 전남 동부권 의원 5명이 공동발의한 ‘여순사건 특별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21대 국회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 유가족 한분 한분의 눈물을 모두 닦아 드릴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여순사건 특별법’의 주요 내용, 전남 동부권 의원들의 공동공약부터 법안 발의까지의 과정, 원내정책회의에서의 당론 채택 강조, 법안 동의 국회의원 152명 명단, 향후 계획 등을 유가족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이에 유가족들은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은 쌍둥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순사건은 특별법 제정이 안돼 사건 발생 7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2001년 16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0대 국회까지 4번째 상정됐으나 18년째 제정이 무산됐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전남 동부권 의원 5명이 공동 발의와 국회의원 152명의 동의를 받아 지난 7월28일 발의돼, 특별법 제정의 소중한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회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환영 논평

기획재정부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를 국가행사로 최종 승인한데 대해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환영 논평을 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논평을 내고 “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여수시민들의 열정과 지혜를 모아 남해안 남중권 유치라는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COP는 197개 당사국에서 2만여명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국제 환경 회의”라며 “여수를 중심으로 남해안 남중권 10개 시·군(여수, 순천, 광양, 구례, 고흥, 진주, 사천, 하동, 남해, 산청)이 힘을 모아 COP28을 유치한다면 동서화합과 국토균형 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COP28은 여수가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라며 “시민들의 뜻을 모아 남중권 유치가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회재, 국가산단 유해화학물질 배출기업에
세금 부과…지방세법 일부 개정안 발의

김회재 의원은 국가산단 내 유해화학물질 배출 기업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화력·원자력 발전소처럼 소음과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국가산단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도 포함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가산단 소재 지역 주민들은 공해, 소음, 악취와 같은 환경문제, 이로 인한 건강, 농작물 피해 등 여러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피해 주민 보상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국가산단 내 유해화학물질 배출 기업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맞춤형 4차추경 7.8조 국회 통과!
소상공인·돌봄·실직·저소득층 지원
모두 웃는 한가위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 광장
2020. 09. 25 (제27호)
당원용
www.jnminjoo.kr
함께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여순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 진상규명 끝까지 사력 다할 것”

소병철 의원, 현대사의 비극 ‘여순사건진상규명특별법’ 대표 발의
주철현·김회재·서동용 의원 등 동부권 의원들 공동 추진 결의

소병철 의원이 전남 동부권 의원들과 함께 개원 초부터 공동으로 준비해 온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을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했다.

소 의원의 제안으로 주철현(여수갑)·김회재(여수을)·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의원 등 동부권 의원들은 지난 21대 총선 전인 3월 29일 공동공약협약을 통해 지역의 오랜 염원인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공동 추진키로 결의한 바 있다.

법안에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김승남 도당위원장 등 당 소속 의원 152명이 동참했다.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설치 △여순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인권교육 실시 △희생자 및 유족의 복지 증진 및 법률지원 사업 지원 △희생자 또는 유족에게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2001년부터 4번이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별법안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21대 국회는 176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과반을 차지한 데다 위원장까지 맡고 있어 어느 때보다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소병철 의원은 “이번 특별법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152명이 동참해 주셨다”며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가족 분들의 명예회복을 향한 우리 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소병철, “홍수피해 주민 신뢰 위해 수공 스스로 감사 청구해야”

“환경부 자체 조사로는 피해주민 승복 안해”

소병철 의원은 섬진강 수계 홍수 피해와 관련, 한국수자원공사가 감사원에 스스로 감사를 청구할 것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

소 의원에 따르면 전날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을 만나 “환경부 자체 조사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피해주민들이 완전히 승복하지 않을 소지가 크다”며 “수공 스스로 환경부 조사가 아닌 감사원을 통한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환경부는 홍수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수해 책임 당사자”라며 “수자원공사는 환경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피해주민들이 조사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뿐 아니라 공사와 환경부도 후유증을 적게 하는 과거와는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주민들의 외침을 외면하고 문제를 오래 끌고 가면 상처는 덧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후속절차가 끝나기 전에 정부의 지원과 함께 수공의 배·보상이 이뤄진다면 주민들 입장에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분쟁이 빨리 종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소 의원은 지난달 25일 법사위 회의에서 “섬진강 수해는 지난달 7일부터 9일까지 집중호우가 예상됐으나 댐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가 댐 수위와 방류조절을 실패한 것이 원인”이라고 규정했다.

또 “감사원은 홍수 관리를 엉터리로 한 수자원공사와 통합 물관리 책임이 있는 환경부를 감사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에도 지급 “환영”

소병철, 순천 택시업계 간담회 건의사항 예결위에 전달

소병철 의원은 23일 “4차 추경안 통과로 법인택시 기사들도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코로나19로 심각한 매출감소를 겪은 택시 업계에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게 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소병철 의원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 법인택시의 경우 당초 정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지난 22일 통과된 4차 추경안은 법인택시 기사에게도 1인당 100만원씩 총 810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개인택시와의 형평성 논란이 해소됐다.

소 의원은 지난 11일 순천을 찾아 민생경제회복 행보의 일환으로 가진 순천지역 택시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건의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그 자리에서 법인택시 기사들은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이 개인택시만을 대상으로 지급돼 좌절감이 크다. 법인택시 기사들도 같은 지원을 받게 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소 의원은 “택시업계 건의를 당 정책위와 순천시의회 민생특위에 가감없이 전달하겠다”고 약속한 뒤 국회 예결위에 법인택시 기사들의 고충과 개인택시와의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전달했다.

소병철, “법무부, 강제징용 배상문제 적극 대응해야”

소병철 의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에 대해 법무부가 적극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 의원은 지난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018년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 일본이 한국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법령해석과 자문 권한을 가진 법무부가 일본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점을 법리상으로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30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손해 배상 청구권을 갖는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소 의원은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맞춤형 4차추경 7.8조 국회 통과!
소상공인·돌봄·실직·저소득층 지원
모두 웃는 한가위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국민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더불어 광장

2020. 09. 25 (제27호)

당원용

www.jnminjoo.kr

서동용 의원은 지난 15일 수해 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을 한 뒤 전남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낙연 대표를 방문, 피해보상 의견이 담긴 성명서를 전달했다.

수자원공사, 섬진강 수해피해 키웠다

서동용,"관계기관 협조 구하고도 동진강 방류는 전혀 안해"

동부권 홍수 때 범람한 섬진강으로 1400~1900㎥ 방류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달 초 전남 동부권이 홍수 피해를 입을 당시 섬진강댐 물을 동진강(전북)으로는 방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동용 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공은 섬진강댐 저수위가 계획홍수위에 임박한 지난달 8일 오전 8시 6분 농어촌공사 및 한국수력원자력에 동진강을 통한 댐물 방류를 위해 협조를 요청해 놓고도 정작 방류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수공은 이날 "동진강 정읍 정우교가 오전 8시 20분 홍수주의보 발효 기준인 6.06m를 초과했고, 동진강 지류인 정읍천 또한 홍수주의보를 초과해 추가적인 홍수량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함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동진강으로 유역변경을 통한 방류로는 섬진당 댐 계획방류량을 낮추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그 시각 섬진강 곡성 금곡교와 구례 서시교 수위는 이미 홍수주의보는 물론 홍수경보수위를 거쳐 계획홍수위를 초과했거나 막 초과하는 시점이었다.

곡성 금곡교는 이날 오전 6시 10분, 구례 서시교는 8시 10분에 계획홍수위(8.82m, 8.21m)를 각각 넘었다.

더구나 수공은 앞서 이날 오전 3시 30분 300㎥이던 섬진강댐 계획방류량을 600㎥으로 높여 이미 7일 물바다가 된 섬진강(금곡교 오후 7시 10분 홍수경보, 서시교 오후 10시 50분 홍수경보수위 초과)에만 방류하고 동진강으로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동진강 수위는 8일 오전 4시 50분까지 홍수주의보 기준인 6.06m보다 훨씬 아래인 3~4m 수준이어서 7일부터 동진강으로 방류했다면 전체 방류량의 7~13%를 꾸준히 내보낼 수 있었다.

섬진강댐은 이어 8일 오전 6시 40분 방류량을 다시 1,000㎥로 늘렸고, 오전 8시 20분부터는 계획방류량을 2,500㎥로 늘렸다.

수공은 이에 대해 "댐 안전이 우려되는 급박한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즉각적으로 수문을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곡성·구례 등에 이날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초당 1,400~1,869㎥의 댐물이 흘러 구례에서만 주택 715동과 상가 579동이 침수됐고, 1,14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반면 동진강으로의 방류량은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평상시 수준인 0.5~1.9㎥에 그쳤다.

동진강은 본류와 지류 모두 8일 오전 한때 홍수주의보를 넘는 수준에 머물다 오후부터 수위가 내려갔다.

수공은 섬진강댐 물의 대부분을 농업용수와 수력발전을 위해 동진강으로 보내 섬진강 하류는 만성적인 물 부족과 갈수기 수질 악화가 심각하고, 만조 때 바닷물이 10km 상류까지 역류해 염해가 발생할 정도다.

서동용 의원은 "관계 기관들은 예상치 못한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라고 주장하지만 홍수가 날 우려가 분명한데도 대처를 못한 인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수해와 관련해 23명으로 구성된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지난 21일 출범시켰다.

"포스코, 광양항 발전 책임있는 역할해야"

서동용, 광양제철에 안전 강화 · 협력사 동반성장 주문

서동용 의원이 포스코에 안전의식 강화, 협력사와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 노력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스코 정책지원실, 포스코경영연구소와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포스코와 협력사가 서로를 완벽한 파트너로서 인식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기업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 공존과 공생, 동반성장 실천 등 책임을 다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 협력사의 매출이 줄어들면서 근로시간 감소 등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스코 관계자들은 외부 경제 여건으로 인한 협력사의 위기 의식에 대해 공감하며 "협력직원의 휴업 발생 시 휴업수당 재원 32억 원 전액을 지급하고, 지역상품권 총 94억 원을 구입해 포스코와 협력사 직원이 동일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전시설물 예산을 지난해보다 약 80억 원 늘린 596억 원까지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서 의원은 "포스코는 광양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큰 축"이라며 "상생경영 및 친환경 경영을 위한 포스코의 노력이 광양발전에 시너지를 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동용, "지리산 성삼재 버스 노선 철회 강력 촉구

서동용 의원은 동서울터미널~지리산 성삼재 구간 고속버스 운행 노선 인가에 대한 철회를 국토교통부와 경남도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국토부 노선조정위원회는 서울-성삼재 버스 노선 신설에 찬성 의견을 결정했고, 경남도는 해당 노선을 인가했다.

노선 신설에 대한 전남도가 환경보호와 주민반대 등을 들어 국토부와 경남도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으나 국토부 노선조정위는 신설 노선을 인가 통보를 했다.

서 의원은 "결정 과정에서 신설 노선의 기·종착지이자 이해 당사자인 구례군민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며 "국토부는 노선 인가 권한과 책임이 없다고 수수방관하지 말고 주민의사에 배치되는 노선 인가 결정을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지리산 성삼재 버스 운행은 구례 주민과 지역사회에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맞춤형 4차추경 7.8조 국회 통과!

소상공인·돌봄·실직·저소득층 지원

모두 웃는 한가위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나주·화순

더불어 광장

2020. 09. 25 (제27호)

당원용

www.jnminjoo.kr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내년 예산 1천615억 확보

에너지·바이오 등 신규 사업 대거 반영

신정훈 국회의원은 7일 2021년 정부예산안에 나주·화순 주요 현안사업 1천61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나주의 에너지 신산업과 화순의 바이오 전략산업을 뒷받침 할 신규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돼 지역사업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게 됐다는 평이다.

대표적인 신규사업의 경우 나주시는 ▲공공도서관 등 혁신도시 생활 SOC 복합화사업(47억) ▲중대형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50억) ▲EV-ESS 사용후 배터리 응용제품 기술개발 및 실증(30억) ▲노후 전력기자재 재제조 기술개발(30억) 등이다.

화순군은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 구축(58억) ▲첨단 정밀 의료산업화 플랫폼(50억) ▲의료연계형 산림치유시설 조성사업(23억) ▲기능성 가정간편식 실증 실용화 지원센터(5억) 등이 포함됐다.

또 나주 고막원과 무안공항, 목포를 잇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2천억원을 비롯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1단계 건설 1천46억원, 광주 송정을 거쳐 나주, 화순, 순천을 잇는 경전선 고속전철 사업도 187억 원의 설계비를 확보해 첫 걸음을 뗄 수 있게 됐다.

특히 사학연금 보육시설(39억), 한국폴리텍대학 전력기술센터 건립(7억), 운곡동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시설개선 사업(3억5천만) 등은 신 의원이 기재부 예산담당 실무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한 끝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나주시와 화순군이 요청한 사업들을 확실히 챙기고자 했으며, 특히 신규 사업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면서 "앞으로 국회심의 단계에서 나주시, 화순군과 함께 국가예산 추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신정훈,

농작물 재해 피해복구 현실화 법안 발의

경영비 지원으로 농가 손실 적극 보전

신정훈 의원은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기준 현실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잇따라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로 인해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보조·지원 기준을 경영비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재해대책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도록 하고 재해 농가 지원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종묘대금이나 비료대금을 보조·지원하는 수준에 머물러 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도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사항에 작물 등의 경영비를 추가했다.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태풍, 홍수 등 재난 피해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기업의 생계 및 경영안정을 위해 주 생계수단이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시설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 복구 지원만으로는 실질적인 재난 피해 복구가 어려워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정훈 '한전공대 개교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2022년 개교 차질 없도록 입법 발의 나서

신정훈 의원은 오는 2022년 3월 예정된 한전공과대학의 차질 없는 개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달 27일 "한전공대 설립은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국가정책으로 정치권은 물론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전공대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법적지위 마련을 위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토록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의원입법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안에는 재정 확보와 예산 지원, 학교 자율 운영은 물론 2022년 개교를 뒷받침할 특례 규정 등이 담길 예정이다.

한전이 정부에 보고한 한전공대 기본계획에는 2022년 부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행 사립학교법 적용 시 한전공대는 2022년 완전 개교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특별법에 의한 캠퍼스 건축물과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신 의원은 "개교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건축 면적이나 임대교사 등은 특별법에 담아야 할 개교를 위한 조건으로 교육부 등과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극적으로 한전의 현장 공정관리를 독려하면서 특별법 제정에 만전을 기해 2022년 개교를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정훈, '특허박스' 도입 위한 법률개정안 발의

특허 등 지식재산 사업소득 법인세 등 감면

특허 등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소득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인 이른바 '특허박스' 제도의 입법이 적극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은 중소·중견기업이 특허 등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해주는 '한국형 특허박스'의 도입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특허 이전·대여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를 감면해 주는 특례를 두고 있어 조세지원이 특허 거래단계에만 한정돼 실질적으로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국형 특허박스 법안은 조세감면 주체를 중소, 중견기업으로만 한정해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이 혜택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그간 미미한 상용화율로 지적받아온 정부 연구개발과제, 신성장산업 기술로 지원대상을 좁혀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신정훈, 공공기관 'RE100' 단계적 의무화 법안 발의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 부여, 경영평가에 반영

기후위기의 심화에 따라 글로벌 주요기업들의 RE100 캠페인(재생에너지 100% 사용) 참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기관들이 단계적으로 RE100을 달성할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 신설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 24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 전력사용량 중 재생에너지 사용량 목표를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반영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RE100 단계적 의무화 법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 250여 기업이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력시장 구조의 한계로 기업들의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에서 PPA제도(전력구매협약)와 녹색요금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면서 빠른 시일안에 RE100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RE100 단계적 의무화 법안은 이들 법안과 함께 추진되어 재생에너지 소비 확대를 선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선도적으로 재생에너지 소비 확대에 참여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모범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맞춤형 4차추경 7.8조 국회 통과!

소상공인·돌봄·실직·저소득층 지원

모두 웃는 한가위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국민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담양·함평·영광·장성

더불어 광장

2020. 09. 25 (제27호)

당원용

www.jnminjoo.kr

“전방위 농업·농촌위기, 농정 대전환 더 미룰 수 없어”

이개호 의원, ‘농민공동행동’과 농업현안 간담회 … “농업 예산 증액 적극 추진하겠다”

이개호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산림비전센터 국제회의실에서 농민단체들과 농업현안 간담회를 갖고 “농업 예산 증액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38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농민공동행동’ 소속 농민의길·농축산연합회·축산단체연합회·농업인단체연합회 등의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농민공동행동 측은 이날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에 농업·농촌·농민의 실태를 제대로 파헤치고 정책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한길 농민의길 상임대표(가톨릭농민회장)는 “기후위기 원인은 따로 있는데 그 후유증과 피해는 농민들이 겪고 있다”면서 “1주일 간격으로 불어 닥친 태풍, 집중호우 피해 등에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농업예산을 증액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농해수위가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먹거리 위기를 대비하는 국가대책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역설했다.

이어 “내년 농식품부 예산안에 코로나19 대책 예산도 빠지고, 한국형 뉴딜도 농업분야는 소외됐을 뿐 아니라 핵심을 비껴가고 있다”며 “식량 자급률 확대, 코로나19 대책, 그리고 그린뉴딜의 효용을 높여 달라”고 요청했다.

김제열 농업경영인회 수석부회장은 “우리 농촌을 지탱하고 있는 중소가족농의 보호대책에 대한 고민을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밝혔다.

축산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축산물 위생관리 업무와 퇴비부숙도 등 축산현안 대응책을 주문했고, 농업인단체연합회 관계자는 2차 정부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방침과 관련, 농민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개호 의원은 농림부 장관 시절 농업·농촌·농민을 역점에 둔 활동들을 설명한 뒤 “2020년 정부예산이 9.1% 올랐을 때 농업예산도 상응하게 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년 정부 예산안 증가율이 8.3%인데 농업예산 증가율(2.3%)을 4%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며 “여·야 의원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4,000억원 가량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개호 의원은 지난달 10일 담양을 방문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을 만나 수해 지역 농협 조합원들과 지역농협을 위해 영농자금 상환연기와 이자 감면 등 중앙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장성국립심혈관센터 건립 등 주요 국책사업 협조 요청

이개호, 전남도 예산정책간담회에서 지역 현안 지원 당부

이개호 의원은 23일 열린 전남도-전남 국회의원 예산정책 간담회에서 장성 국립심혈관센터 건립, 담양 한국정원센터 건립, 함평 축산과학원 이전, 영광군 e-모빌리티사업등 지역구내 국책사업 추진에 있어 전남도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날 김영록 전남지사에게 “막바지에 다다른 제5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을 위한 지속적 노력과 함께 국도 제23호선 신광~영광 간 도로확포장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광~불갑 노선 우선 추진 등을 도와달라”고 밝혔다.

이어 지리적표시제 요건에 가공지를 포함하여 ‘영광 굴비’가 수산물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협조도 요청했다.

이 의원은 또 “섬진강댐 댐 관리 부실로 인한 수해피해, 전라선 고속철화 사업 등 전남 주요 현안에 대해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전남도가 원팀으로 화합하고 공동전략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개호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금 39억 확보

담양·함평·영광·장성 4개군 현안·재난안전 사업비 9건

이개호 의원(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은 지역현안 및 주민안전 사업에 투입될 지역구 9개 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총 39억 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특별교부금 내역을 보면 담양군은 ▲담양 작은영화관 건립 4억원 ▲대전면 삼인산 진입로 확포장공사 3억원 ▲담양호 주변 낙석방지책 설치 및 퇴적토 준설 2억원 등 총 11억원이다.

함평군은 ▲함평군청~농어촌공사간 도로 확포장 6억원 ▲노후교량 석계교외 4개교 보수보강공사 5억원 등 지역 SOC 및 재난방지를 위한 사업에 총 11억원이 투입된다.

영광군은 ▲이모빌리티 이용 및 안전시설 설치사업 9억원 ▲불갑사 관광지~불갑저수지 PM전용도로설치 2억원 등 11억원의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군에서 역점과제로 진행하고 있는 e모빌리티 관련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장성군은 ▲제2황룡교 주변 경관개선 사업 5억원 ▲황룡강변 인공폭포 조성사업 3억원 등 총 8억 원이 지역관광환경 개선 사업에 사용된다.

이 의원은 “4개 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확보한 이번 특별교부금으로 지역의 시급한 현안 해결과 지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국회 행정안전위 통과

이개호 의원,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

이개호 의원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행전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22일 행안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법사위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다.

‘고향세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이 확정되면 지자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직접 모집·접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접수된 기부금은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 목적으로 만 사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감면, 지역특산품과 관광지 무료입장 혜택을 답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애향심 고취, 열악한 지자체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맞춤형 4차추경 7.8조 국회 통과!

소상공인·돌봄·실직·저소득층 지원

모두 웃는 한가위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국민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고흥·보성·장흥·강진

더불어 광장

2020. 09. 25 (제27호)

당원용

www.jnminjoo.kr

새 전남도당위원장에 김승남 의원 선출

도당 상무위원회 만장일치 추대…남악복합주민센터
“문재인 정부 성공, 정권 재창출 선봉에 서는 전남도당 건설”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달 19일 무안 남악복합주민센터에서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상무위원회)에서 새 전남도당위원장으로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사진〉

이날 대회에는 서삼석 전 도당위원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신정훈·김원이·주철현·소병철·윤재갑 국회의원과 김한종 도의회 의장, 김종식 목포시장을 비롯한 시장·군수 등 도당 상무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집중호우 피해와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인해 함께 열릴 예정이었던 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는 취소됐다.

김승남 신임 도당위원장은 수락연설을 통해 “지난 총선에서 지역민들의 목소리는 일하는 국회, 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이뤄달라는 것 딱 두 가지였다”며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재집권의 길로 가기 위해 50만 전남 당원들과 함께 선봉에 서겠다”는 취임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원칙 있고, 공정하며, 겸손한 도당을 건설하고 재집권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마다않고 하겠다”며 “지역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청년·여성 당원 중 좋은 인재 발굴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임 김 도당위원장은 고흥출신의 재선 국회의원으로 전남대 총학생회장과 전대협 부의장으로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고, 19대 국회에서 당 수석사무부총장,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장흥 수문~고흥 녹동 연륙교 건설 및 ‘국도 77호선’ 승격 촉구

김승남 의원, 주민 1만5천명 서명부 기획재정부 장관에 전달

김승남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면담하고, 장흥군·고흥군의회 의원들과 함께 ‘장흥 수문~고흥 녹동 연륙교 추진을 위한 국도 77호선 승격 지정 촉구’서명부를 전달했다. 〈사진〉

장흥 수문~득량도~고흥 녹동을 잇는 연륙교가 설치되면 현재 85km인 이동거리가 14Km로 줄어들고, 자동차 기준 이동시간도 1시간 18분에서 14분으로 크게 단축된다. 지역간 접근성도 높아져 공동생활권 형성에 따른 주민편의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남 의원은 “장흥 수문~고흥 녹동 연륙교가 건설되면 남해~여수~고흥~보성~장흥~강진~완도를 잇는 이른바 ‘남해안실크로드’가 완성된다”며 “고흥·보성·장흥·강진을 비롯한 전남권 관광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고흥군의회 송영현 의장, 이재학 부의장, 이연숙 의원, 박미옥 의원, 김민열 의원, 류제동 의원, 이재기 의원과 장흥군의회 유상호 의장, 채은아 부의장, 왕윤채 의원, 김재승 의원, 위등 의원, 백광철 의원, 윤재숙 의원이 참석했다.

도당위원장 수락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동지 여러분!

어제 전남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승남입니다.

먼저 우리당의 뿌리이자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전남도당의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당원동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년간 총선 승리의 빛나는 리더십을 발휘해주신 서삼석 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코로나 19가 재확산되고, 수해 지역민들의 고통이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심기일전 초심으로 돌아가 집권당으로서 책임정당으로서 이 국난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여 문재인정부의 성공과 재집권을 이뤄내야 합니다. 그 길에 전남도당이 최선봉에 서서 밑거름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앞으로 도당의 운영은 흔들리지 않은 원칙아래, 공정하고 겸손한 도당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시·도당을 견인해 내는 강한 전남도당을 건설해 내겠습니다.

아울러 도당의 제1목표는 지역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자, 조력자 역할임을 명심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정권재창출은 지난 총선 때 지역민들께서 우리당과 열 분의 국회의원들에게 부여해 준 제1명령입니다.

동지여러분! 재집권을 위한 2022년 대장정의 길에 대동단결의 힘으로 힘차게 전진해 나갑시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가내에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약력

-1965년 고흥출생
-전남대총학생회장(87)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
-19대, 21대 국회의원

맞춤형 4차추경 7.8조 국회 통과!
소상공인·돌봄·실직·저소득층 지원
모두 웃는 한가위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국민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해남·완도·진도
더불어 광장

2020. 09. 25 (제27호)
당원용
www.jnminjoo.kr

윤재갑 의원,
농어업 과세특례 5년 연장 추진

기후변화·코로나19 장기화 따른 농어업 위기 타개 시급

현행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과세특례를 5년간 연장하고,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수산물 유통·교육시설 취득세·재산세 감면비율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재갑 의원은 지난 11일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올해 말일 일몰 예정인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산업에 대한 과세특례 기한을 2025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했다.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와 관정시설 취득세·재산세 면제, 자영어민 등의 취득세 50% 감면 등의 세제혜택이 모두 포함된다.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등록면허세 50% 감면, 농협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도 같은 기간 연장된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취득하는 화훼공판장, 농식품유통교육원, 농산물 비축기지 등 유통·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비율은 각각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했다. 이 경우도 적용기한은 5년간 연장한다.

윤재갑 의원은 "기후변화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어업의 심각한 위기로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기적인 조세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농산물 최저가보장제 및 농가수입보장보험 도입" 추진

윤재갑, '농수산물유통법 개정안' 1호 법안으로 발의

윤재갑 의원은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와 농가 수입보장 보험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0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정부가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해 산지폐기와 수매비축 등을 통한 가격안정 정책을 내놓았지만, 농가 소득에 대한 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농업계 목소리"라며 개정에 나섰다.

또, "일부 지자체가 가격 폭락에 대해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하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기초 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최저가격 보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작물 수입보장보험과 연계, 농어업재해보험으로 대체 지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윤 의원은 "최저가격 보장제도와 관련해 몇 건의 법안이 발의 된 바 있지만 중앙정부가 과잉생산과 재정소요를 이유로 반대해 무산된바 있다"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윤재갑 의원,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임명

윤재갑 의원이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으로 임명됐다.

윤 의원은 앞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별 주요 정책을 발굴하고 정책에 대한 당·정간 의견 조율 및 갈등 조정에 나서게 된다.

윤 의원은 제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기초 농수산물 최저가격제도 도입법안과 공익형직불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안 발의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해왔다.

윤 의원은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큰 직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 농어촌, 농어민의 '대변인'이자, '지킴이'로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재갑,
도서개발 촉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개발 제외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15년으로 완화

윤재갑 의원은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15년이 지난 도서로 완화하는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개발이 필요한 도서(島嶼)를 지정해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인 10년이 지난 도서는 개발대상 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0년이라는 기간은 섬을 육지로 인정할 정도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기간이며, 교량 등의 개통 이후에도 여전히 주민의 생활은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하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개발대상 제외 기준을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15년이 지난 도서로 완화한 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헌법 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며 "주민들의 삶의 공간이며,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섬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10년이라는 기간을 기준으로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돼 도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섬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국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맞춤형 4차추경 7.8조 국회 통과!
소상공인·돌봄·실직·저소득층 지원
모두 웃는 한가위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영암·무안·신안
더불어 광장

2020. 09. 25 (제27호)

당원용

www.jnminjoo.kr

서삼석, "자연재난, 코로나 겹친 농어촌 특별지원 강력 촉구"

서삼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이 당 상임위 간사단 회의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 민생지원 대책' 논의 과정에서 농어촌에 대한 특별지원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내년 예산 규모 60% 증가, 농어업 분야는 0.6% 증가 그쳐
농어민수당 등 기본소득 논의, 식량자급률 헌법명시 "시급"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와 함께 냉해,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삼중고를 겪고 있는 농어촌에 대한 특단의 지원대책이 절실한데도 정부지원에서 농어촌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며 농어촌 지원대책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서삼석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올해 1, 2, 3차 추경 순증 합계는 34조6천억 원이었지만 국회 농해수위 소관 2부 3청(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농진청, 해경청)의 2020년 1, 2, 3차 추경 순증합계는 오히려 2천122억 원이 삭감됐다.

국가 예산에서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연 평균 예산 증가율이 5.8%에 달하고 있는 반면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연 평균 예산 증가율은 2.3%에 불과했다.

2021년 국가 예산요구 규모는 542조 9천억원으로 2020년도 예산 512조 3천억원 대비 6.0% 가 증가한 수준인데 반해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내년 예산요구 규모는 21조 7천억원으로 올해 21조 5천억원에 비해 0.6% 증가에 그쳤다.

서 의원은 이와 관련, 시급한 농어촌 지원대책으로 농작물 재해보상 현실화와 재해보험가입 국비지원 확대 및 의무화를 통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또 폭우, 태풍피해 절감 및 지원책 마련과 함께 코로나19 위기의 식량자급대책의 헌법명시 및 제고방안 법제화의 시급성과 함께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 금융지원 대책의 확대추진을 촉구했다.

끝으로 농어업인의 사회안전망 강화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농어민수당 등 기본소득 논의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서삼석 의원, 무인도화 방지, 10인 미만 거주 섬 지원

서삼석 의원은 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정책수립과 섬발전연구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도서개발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

도서개발촉진법, 김산업진흥법 등 5개 법안 대표발의
…섬 정보망 구축·섬발전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

개정안은 섬의 무인도화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도서개발촉진법 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주민 10인 미만의 섬에 대한 지원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최근 각국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섬의 개발과 자원화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영토·주거·문화·해양·생태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할 중장기적 발전전략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섬의 청정지역으로서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며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연구기관이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또 ▲김산업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김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급변하는 해양치안환경과 국제해양질서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해양경비법' 개정안'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 등 총 5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야 국회의원 19명 참여 '국회 섬발전연구회' 창립

서삼석 대표의원 "체계적 조사 · 연구 · 정책수립 필요"

서삼석 의원은 22일 서울 산림비전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섬발전연구회' 창립총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섬발전연구회는 섬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국회의원 연구단체다.

연구회는 앞으로 섬 지역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법률안 제·개정, 정책연구보고서 발간 등을 할 예정이다.

또 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전문가, 섬 주민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해 현안에 즉각 대응함으로써 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날 창립총회는 연구책임의원인 김원이 의원의 사회로 대표의원의 개회사와 연구단체의 운영 및 활동계획 등에 대한 소개, 섬 주민들의 희망사항 등을 담은 동영상 시청 순서로 진행됐다.

서삼석 대표의원은 "섬을 둘러싼 국제적 분쟁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섬의 가치는 영토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중장기적인 섬 발전전략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삼석 "식량자급률 확보 국가적 의무 헌법에 명시해야"

'식량자급률 어떻게 높일 것인가' 토론회…16일 서울산림비전센터

서삼석 의원은 16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식량안보 위기 속에서 식량자급률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 산림비전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식량자급률 어떻게 높일 것인가'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서 의원과 위성곤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정신문이 주관했다.

토론회 좌장은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가 맡았고,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주제발표에 나섰다.

토론회에서는 식량자급률 제고 방안으로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품종 및 유통기반 조성 노력을 지속하고, 적정 재배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타작물 전환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품질 제고 및 시장이 선호하는 가공 적성을 개선하기 위한 신품종과 재배기술 개발·보급 등 R&D 사업의 확충도 제안됐다.

또한 우리나라는 연간 1,600만톤 이상을 외국에서 사들이는 세계 5대 식량수입국으로 세계 식량위기 발생 시 국내 식량 공급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삼석 의원, 무인도화 방지, 10인 미만 거주 섬 지원

서삼석 의원은 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정책수립과 섬발전연구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도서개발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섬의 무인도화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도서개발촉진법 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주민 10인 미만의 섬에 대한 지원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최근 각국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섬의 개발과 자원화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영토·주거·문화·해양·생태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할 중장기적 발전전략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맞춤형 4차추경 7.8조 국회 통과!
소상공인·돌봄·실직·저소득층 지원
모두 웃는 한가위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